

거악 소탕하던 ‘칼잡이’ 검사, 이제는 국민 혈세·권익 지키는 ‘방패’ 로

-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 4배 급증·범죄인인도 위해 해외 당국과 공조 강화
 - 연간 1,000억 원대의 범죄수익환수·관련 법제 지속 정비
-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피해자 알권리 보장·내년 범죄피해자통합지원시스템 가동
 - 국제투자분쟁 4연승 등 ‘국민의 변호사’ 역할·쿠팡 사건 등 대응에 만전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공익대표자로서 검사 역할 지속 강조

(사례A) 전성환 검사는 최근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의 송환을 위해 캄보디아로 날아가 캄보디아 법무부 장관을 직접 면담하고 이들의 신속한 송환을 요청하였다.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들은 미국, 일본,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홍콩 등 외국 법무부 담당자들의 업무 시간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수시로 문자와 통화를 주고 받는다.

(사례B) ‘론스타 킬러’로 불리는 양준열 검사는 워싱턴 D.C., 헤이그, 런던, 파리 등 해외 주요 도시들의 시간에 맞춰 매일 새벽까지 영미권의 글로벌 로펌 변호사들 및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PCA(상설중재재판소) 등 국제중재 기관들과 영문 서면을 주고 받고 화상회의를 한다. 평균 수면 시간은 하루 약 4시간에 불과하다. 론스타, 엘리엇, 쉐들러 사건 등 치열한 국제 분쟁의 최전선에서 수조 원의 국부 유출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정당한 규제 주권을 지켰다는 사실이 양 검사로 하여금 밤샘 업무의 피로를 잊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과거 ‘칼잡이’로 통하며 수사와 기소에만 집중하던 검사들이 이제는 국부(國富)를 지키고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공익의 대표자’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새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실적을 4배 가까이 끌어올리고 연평균 1,000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데 이어, 수조 원대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등 국가 대리인으로서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까지 전방위로 확대하며 ‘국민의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검찰의 이같은 ‘조용한 진화’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강조된 ‘공익 대표자’ 행보와 맞물려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① 해외 도피 범죄인 대거 송환, 국제공조 강화 방침

검사는 조약과 국내법에 따른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의 요청 주체로서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외국 사법 당국과의 국제공조 과정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최근 범죄의 국제화·조직화에 대응하여 그 임무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검찰의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은 '22년 70명에서 '25년 274명(송환 대상국가 33개국)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도 1~4월 동안 '캄보디아 부부사기단(1. 23.)', 박왕열(3. 25.)을 비롯한 범죄인 97명을 송환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법무·검찰의 범죄인 송환실적>

연도별	송환 실적(명)*	송환대상국가
2022년	70	21개국
2023년	96	21개국
2024년	180	28개국
2025년	274	33개국
2026년 1~4월	97	17개국

*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한 송환과 검찰 수배 사건의 강제추방, 자진귀국을 더한 실적

▶ 범죄인 송환대상국가도 '22년 21개국에서 '25년 33개국으로 다양화되었고, 기존 아시아, 유럽국가 중심에서 '25년에는 아시아, 유럽국가는 물론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남미(4명),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1명)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하여 송환 국가 및 지역 다양화

법무부는 외국의 공조 중앙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유럽연합 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 등 지역 공조 네트워크를 통하여 외국 중앙기관과의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해외 도피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송환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 공조 중앙기관(Central Authority) : 조약과 국내법에 의해 범죄인인도·형사사법 공조 등 국제공조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26. 5. 기준, 한국은 82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79개국 발효), 80개국과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78개국 발효)]

** 한국이 유엔범죄마약사무소(UNODC)에 지정공여하는 기여금으로 운영되는 ‘공조 중앙기관 담당자들의 네트워크’로, 동남아시아, 일본, 미국, 프랑스, 중국, 캐나다 등 23개국 가입(‘26. 5. 기준)

*** '02. 유럽 내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한 기구로, 법무부는 '25. 4. 유럽연합 형사사법협력기구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컨택포인트 지정, 정보공유·형사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

② 연간 1,000억 원대의 범죄수익환수, 관련 법제 지속 정비

검사는 범죄수익의 특정·추적·보전·집행·국고귀속·피해자 환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당하며,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범죄 동기를 차단하고 국민 재산 보호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금세탁 대응, 해외 은닉재산 환수, 피해자 환부 등으로 업무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공소 유지와 형 집행의 책무를 담당하는 검찰은 최근 수년간 연평균 1,000억 원대의 범죄수익환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지능화·국제화로 가상자산, 차명계좌, 해외재산 등을 활용한 은닉수법이 고도화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실적>

연도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3월)
추징금 집행액(원)	993억	923억	1,526억	1,396억	120억

법무부는 범죄수익환수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특히, '26. 4. 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 향후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은닉·분산된 범죄수익에 대한 보다 신속한 환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이스피싱·마약·성착취물 범죄 등에 대해서, 범인의 사망, 소재불명, 불특정 등의 사유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범죄수익환수 법제 정비 현황>

- 보이스피싱 등 주요 사기범죄 피해재산의 필요적 몰수·추징, 추정 규정 도입('25년 11월)
- '독립몰수제'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26년 4월)
- 특정 불법사금융 범죄를 범죄피해재산 환부대상 범죄에 추가('26년 5월)

③ 범죄피해자 구조금 증액, 범죄피해자 알권리 보장 추진

검사는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업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을 증액하고,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긴급생활안정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직장·학업 등으로 평일 심리치료가 어려운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365 스마일 서비스를 개시하고(야간·주말 심리치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데 모아 생성형 AI 기반의 법률구조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등 주요 개정 내용]

□ 범죄피해구조금 증액

- 모든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 하한을 약 8,200만 원*으로 상향

< 유족구조금 하한액 비교표 >

* 도시일용근로자 월 평균임금 약 344만 원 기준, 유족 1인인 경우 기준

유형	유족 유형	기존	개정	비교
1	배우자, (생계의존) 자녀	약 1억 6,500만 원	약 1억 6,500만 원	-
2	(생계의존) 부모· 손자·조부모·형제	약 1억 800만 원	약 1억 2,300만 원	1.14배
3	(생계의존X) 자녀·부모	약 4,800만 원	약 9,600만 원	2배
	(생계의존X) 손자·조부모·형제	약 1,600만 원	약 8,250만 원	5배

□ 긴급생활안정비 신설

- 강력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월 평균임금 (약 344만 원) 수준의 생활안정비 지원(1회, 350만 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27년 1월 대국민 서비스 예정입니다. 범죄피해자에게 다양한 기관의 보호·지원 제도를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피해자가 언제·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장기 추진 과제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도 및 통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가해자의 석방·출소 등 일부 정보에 대해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통지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수사 초기부터 출소 단계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알권리 및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④ '국민의 변호사'로 국제투자분쟁 4연승, 전문 인력 확보 등 과제

검사들은 전통적인 수사·기소를 넘어, 공익의 대표자이자 '대한민국의 대리인 (Republic of Korea's Counsel)'으로서 글로벌 대기업과 외국계 대규모 자본 등의 공격으로부터 수조 원대의 국민 혈세를 지켜내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무부 산하 '국제투자분쟁과' 소속 검사들은 청구액 합계 약 10조 원이 넘는 각종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방대한 증거 수집, 사실관계 조사, 서면 작성 및 검토, 구술심리(국외재판) 참석 등 실무를 직접 수행하며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정부대리로품을 관리·감독하는 등 ISDS 절차 전 과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식 중재제기된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현재까지 총 10건(종결사건 포함)입니다. 이중 최근 법무부 국제법무국 산하 국제투자분쟁과의 ISDS 대응팀은 론스타, 엘리엇, 원들러, 중국투자자 사건 등 주요 ISDS 사건들에서 잇따라 전부 승소하며 '4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국제투자분쟁 승소 사례

- **중국투자자 사건** : '24년 5월 최초 청구액 2조 원에 달했던 중국 투자자(민봉진) 사건에서 한국 정부 최초로 본안 심리를 거쳐 전부 승소를 이끌어내고 소송비용 약 50억 원 환수 결정을 받아내었음(참고: 현재 중국투자자 측의 판정 취소신청으로 판정 취소절차 계속 중)
- **론스타 사건** : '25년 11월 약 13년간 사건이 계속된 청구액 약 6조 9,000억 원 규모의 론스타 판정 취소절차에서 완승하여 원 중재판정에서 인정되었던 약 4,000억 원의 국가배상책임을 모두 소멸시켰고, 취소결정 선고 후 불과 29일 만에 론스타로부터 정부의 소송비용 약 74억 원 전액 환수하였음
- **엘리엇 사건** : '26년 2월 영국 법원에 제기한 엘리엇 중재판정 취소소송 환송 1심에서 승소하며 약 1,600억 원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 중재판정이 일부 취소되어, 환송중재 절차 진행 중임
- **선들러 사건** : '26년 3월 최초 청구액 4,900억 원, 최종 청구액 약 3,250억 원 규모의 선들러 ISDS 중재절차에서도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으며, 승소 후 한 달 만에 선들러 측으로부터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 원을 전액 환수하였음

최근 쿠광 미국 주주 투자사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ISDS 중재의향서 접수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 론스타, 엘리엇 사건처럼 대규모 분쟁에서 승소하려면 국제중재, 국제투자법, 투자협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 및 지원 확대 등 전문 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들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국제투자 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5년마다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법제화하고, 국제투자분쟁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 간 협력 의무를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국제투자중재시설 설치 및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현재의 국제투자분쟁 대응 체계를 국가 차원의 인프라로 제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과거사 사건 항소 취하 등을 통한 국가 폭력 피해자 구제 등 공익대표자로서 검사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검사들이 이러한 역할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입니다.

담당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최태은	(02-2110-3033)
		담당자	홍보담당관	한정진	(02-2110-3038)
	국제형사과	책임자	과장	이지연	(02-2110-3553)
		담당자	검사	황익진	(02-2110-3554)
	국제 투자분쟁과	책임자	과장	조아라	(02-2110-3331)
		담당자	검사	양준열	(02-2110-4321)
	인권구조과	책임자	과장	반지	(02-2110-3641)
		담당자	검사	강민정	(02-2110-4252)